



주간통일정세 2011-28(2011.07.04 ~ 07.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39돌 맞은 '7·4공동성명'...북한의 평가(7/4,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 7·4 남북공동성명 39주년을 맞은 4일 오전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9돌 사회과학원 반향'이란 제목으로 보도
 - 북한은 7·4공동성명을 김일성 주석의 최대업적 가운데 하나로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평가하는데, 6·15 남북공동선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업적 중 하나로 남북관계의 기초가 되는 '대강(大綱)'이라는 그들의 평가와 대구를 이룸.
 - 실제로 북한은 김 주석의 통일 유훈을 김정일 위원장이 계승해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이 채택됐다고 선전하며 7·4에 뿌리를 둔 6·15에 입각해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
 - '7·4성명은 6·15의 뿌리'라는 북한의 인식과 선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 내포
 -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7·4성명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6·15선언에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북측의 주장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3일 7·4성명 39돌에 즈음한 논설을 통해 "반민족적인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건 괴뢰역적 패당은 지금 특대형 모략극과 도발행위들을 일삼으면서 남북관계를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
- 北 "평양을 영원한 김일성조선의 수도로"(7/4,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7·4 남북공동성명 39주년을 맞은 4일 '평양을 영원히 김일성조선의 수도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만수대지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 평양을 영원히 김일성조선의 수도로 빛내어나가자"고 강조
 -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당' '김일성민족' '김일성조국' 등의 표현으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해왔는데 평양까지 '김일성조선의 수도'라고 규정함으로써 김 주석에 대한 우상화와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임.
 - 노동신문은 또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도시'로 선전하고 "평양대극장과 옥류관, 평양학생소년궁전, 옥류교 등 오늘도 훌륭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수많은 창조물들마다 어버이 수령님의 빛나는 영도의 손길이 어리여었다"고 함.

● "3.4 디도스 공격 北소행"(7/5, AP통신)

- 북한 또는 북한의 동조자들이 올해 초 한국 정부와 은행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5일 미국의 컴퓨터 보안업체 맥아피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맥아피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009년도 미국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켰던 대대적인 공격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맥아피 보고서는 한국의 20여개 이상의 사이트를 목표로 했던 올해 사이버 공격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이를 복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찰 목적의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AP 통신은 전함.
-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위협분석 담당 부사장은 "이 공격이 정확히 누구의 소행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이 공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2009년과 2011년 공격에 사용된 코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똑같은 범인에 의해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95%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함.
- 또한 알페로비치 부사장은 "공격이 단기간 지속되고 정교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이 공격이 범죄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 北 '서해5도 개발계획' 연일 맹비난(7/6, 우리민족끼리)

- 우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책동'이라며 연일 비난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서해5도처럼) 위험한 곳에 국제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속심은 바로 관광의 간판으로 북침공격 음모를 가리고 전쟁 도발 책동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있다"고 주장

● 北 "핵억제력 보유는 정당"(7/6,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논평 '핵위협의 장본인'을 인용, 미국이 한반도에 핵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북한)이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고 밝힘.
- 논평은 미국이 6·25 전쟁 당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진짜 핵위협의 가해자는 미국이며



그 피해자는 우리 공화국"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며 우리 공화국에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

- 논평은 이어 "미국이 대조선핵위협을 가중시키면서 임의의 시각에 핵 선제공격을 가하려 하는데 우리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 보유는 당연한 자주권 행사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고 강조

● 北 공개활동..김정일 '경제'·김정은 '軍' 치중(7/6, 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공개활동(현지지도)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경제 분야, 후계자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분야에 가장 많이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상반기 공개활동은 총 63회이며, 분야별로는 경제가 28회로 가장 많았고, 군 관련 14회, 외교사절 접견을 비롯한 대외활동 7회, 기타 14회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분야 가운데 경공업과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공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의 경제분야에 대한 공개활동 치중은 경제안정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
- 특히 김 위원장의 군 관련 공개활동 14회 가운데 김정은이 12회나 수행한 것이 눈에 띄는데,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책에 맞게 후계자로서 군 장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여동생인 김경희(48회) 당 경공업부장으로 김경희의 남편이자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45회) 국방위 부위원장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8년 외병 이후 김 위원장의 혈육에 대한 의존을 엿볼 수 있는 대목

● 北 "테러 반대에 적극 협력할 것"(7/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6일 김 부상이 지난달 28일 스리랑카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협상기구 제50차 회의에서 북한의 김성기 외무성 부상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
- 김 부상은 또 "인권문제와 관련해 해결돼야 할 초미의 문제는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생명권과 생존권, 교육문화적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이어 "현재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여러 기구 성원국이 미국의 일방



적인 제재와 봉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저해를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개별적인 국가에 치외법권적인 강권행위를 막기 위한 구속력 없는 법률적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일, 평북 협동농장·기업소 현지지도(7/6,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협동농장과 신의주시 낙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신암협동농장에서 농장 연혁소개실, 기계화작업반, 청년작업반 시설 등을 둘러보고 "경지면적이 제한돼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길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찰하는 데 있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이어 "농사를 집약화·과학화하고 농장원들을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사일에 기계화를 계속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
- 낙원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다"고 말함.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기남·최룡해·김평해 당비서, 이만건 평안북도 책임비서 등이 수행함.

● **조용한 김일성 17주기...경제·승계 방점(7/7, 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17주기(8일)를 하루 앞둔 7일 북한은 여느 때처럼 조용하기만 하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공식행사로는 5일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열린 농업근로자 회고모임, 6일 열린 직맹원의 맹세모임과 여맹원의 회고음악회, 청년학생의 회고무대 정도이고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소형전지 3종, 개별우표 23종 등 기념우표를 발행
- 오히려 김 주석에 대한 추모 분위기보다 지난달 29일 남한 전방부대의 구호를 문제삼아 '보복성전'을 공언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이어가는 대남 압박과 위협이 더 요란하며, 또 오는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을 앞두고 친선대표단을 교환하는 등 대외 행사에 더 열을 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공무원 3년마다 재평가...불합격 땐 직천(7/9, 연합뉴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5년 정령으로 채택한 '공무원자격판정법'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은 3년마다 이뤄지는 자격판정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연합뉴스



가 전함.

- 북한의 공무원 자격판정 시험은 '제자리 급수 판정'과 '올라가는 급수 판정'으로 나뉘는데, '제자리 급수 판정'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한 급 내려가는 수모를 감내해야 하며, 가장 낮은 직급인 6급까지 내려간 공무원은 6개월마다 자격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에서 공무원이 '올라가는 급수 판정'에 응시하려면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특징적
- 또한 연합뉴스가 1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따르면 북한의 입법기관, 즉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여기에서 일하는 보조일꾼들은 자격판정을 받지 않아도 됨.

● **北지방선거 선거자명부 공시(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중앙통신은 "선거자 명부는 북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에 철저히 준해 작성됐다"며 이같이 전함.

● **김정일, 후진타오에 '우호조약' 50주년 축전(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에게 북중우호조약 50주년 기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조중우호조약 체결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항구적으로 공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고 밝힘.
- 이어 중앙통신은 이날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보낸 축전에서 "중조우호조약은 중조관계에서 중요한 문건이고, 중조친선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친선"이라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7/5, 중방)
- 김정일,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 등에 「감사」 전달(7/10, 중방)
- 김정일, 제2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찾아 경공업부문 사업 현지도(7/10, 중통·중·평방)
 - 문경덕(평양시당책), 김기남(黨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최용해(黨비서들), 박봉주(黨 제1부부장) 동행
- 김정일, 중앙동물원 현지도(7/11, 중통·중방)
 - 김정은,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박도춘, 최용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이명수,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黨 중앙군사위 위원들), 현철해(국방위 국장) 동행
- 김정일·김영남·최영림 - 호금도·오방국·온가보, 7.10 '中-北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돌' 관련 축전 교환(7/10,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7.4공동성명' 발표 39돌 관련 "김일성 영도의 빛나는 결실, 조국통일 운동의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평가하며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투쟁강령"이라고 주장(7/4,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7.4李大統領 실명 거론 南정부 비난 '평양시 軍民대회' 10만여 명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7/4, 중통·중·평방)
 - 최영림,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이용무, 김정각, 김양건, 최용해, 문경덕,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 등 참가
- 김영남, 7.6 離任 駐北 니제르 대사 '부바카르 아다무'와 담화(7/6, 중통·평방)
- 김일성 사망(1994.7.8) 17주기 '추모행사', 7.6 진행(7/6, 중통·중·평방)
- 北노동당친선참관단(단장 : 태종수 黨비서), 7.6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영강(중앙정법위 서기)과 담화(7/7, 중통)
- 최영림 총리, 7.7 평양 두단오리공장 및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장 현지요해(7/7, 중통)
- 최태복, 7.7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베트남 신임대사와 담화(7/7, 중통)
- 北 노동당 친선참관단(태종수 黨비서), 7.6 中 베이징시 당서기 '류기'와 담화(7/8, 중통)
- 김일성 사망 17돌 관련 黨·政 간부들, 軍 지휘성원들, 駐北 외교대표 등, 7.8 금수산기념궁전 참배(7/8, 중방·중통)
- 北 친선대표단(단장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궐 부위원장), 7.9 '朝-中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7.11) 50돌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 출발 및 '베이징' 도착(7/9, 중방·중통·평방)
- 北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7.24)를 위한 구·분구 선거위원회들에서 7.9 '선거자 명부' 공시(7/10, 중방·중통)
- 양형섭, 7.9 천진영빈관에서 장고려(中천진시당 서기)와 담화(7/10, 중방)
- 中친선대표단(단장 : '장덕강' 黨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7.10 평양도착(7/10, 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6.29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생산정형 현지요해 및 '협의회' 소집(6/30, 중통·중방)
 - 이성림(교통운수 부장), 왕유림(길림성 인민정부 성장), 초하경(국무원 부비서장), 진건(상무부 부부장), 장건생(외교부장 조리), 양연(대외연락부장 조리), 등

나. 경제

● FAO 北대표 "농업에 전 국력 집중"(7/4, 조선중앙통신)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대표가 지난달 FAO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조선(북한)은 농업을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적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북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FAO총회 제37차 회의에서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 이념에 따라 앞으로 기구(FAO)와 모든 성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식량안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또 "기구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보장되도록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돌리며 성원국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농업 전략과 정책, 그리고 농업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

● EU집행위, 北에 1천만유로 구호식량 지원(7/4, 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EU 집행위의 대(對) 북한 식량지원은 지난 2008년 집행위 산하 인도 지원사무국(ECHO)이 평양사무소를 폐쇄하고 직원을 철수시키면서 중단했으나, EU 집행위는 북한의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배급) 절차를 엄격히 모니터링하는" 등 전례 없이 엄격한 조건 아래 구호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 EU 집행위는 1천만 유로(약 155억 원)를 대북 구호식량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주로 북한 북부와 동부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주민 약 6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
- EU 집행위는 북한에서 주요 곡물 수확기가 오는 10월이나 돌아올 것이라면서, 근년 들어 식량생산이 가장 저조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긴급 구호식량 제공의 이유를 설명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EU 원조·구호·위기대응 담당 집행위원은 "확실히 북한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시급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구호식량의 전용 및 배급 문제에 대한) 타당한 우려를 고려해 북한의 항구에 구호식량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엄격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 EU 집행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산모 ▲노약자 등 가장 취약한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준비된 구호식량이 곧바로 배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 부분이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설명

● 北대학생들 건설현장에 10개월간 동원?(7/5, 미국의소리(VOA); 교도통신)

- 북한이 올여름 건설현장에 대학생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자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 내년을 앞두고 평양시 10만호 살림집 건설 등 대형공사 건설현장에 대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음.
- 5일 VOA에 따르면 국제적인 대학언론 매체인 '유니버시티 월드뉴스'는 북한 대학생이 지난달 27일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피터 휴즈 평양주재 영국대사를 인용해 "공식적인 휴교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평양의 대학생들이 2012년 4월까지 평양 근처의 건설 현장에 동원된다"고 밝힘.
 - 또 VOA는 최근 방북했던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학생들이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에 동원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학생들을 건설현장에 동원하려고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모든 대학에 휴교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실제로 북한은 청년들의 만수대지구 야간작업까지 소개하며 평양의 건설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각종 공장·기업소 등에 투입돼온 게 사실
 - 대표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 후반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건설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때도 '청년돌격대원'으로 평양의 대학생들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南에 농수산물 위장수출 거점 설치 계획" (7/5, 교도통신)
- 한국을 거쳐 북한에 벤츠를 불법 수출한 재일동포가 2008년 한국에 유통센터를 세워 북한산 농수산물을 제3국에 위장 수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수사관계자는 최근 외환거래법 위반(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된 '합동홀딩스' 임원 안성기(71, 조선적) 피의자의 자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문서를 압수
 - 문서에는 한국에 유통센터를 건설해 북한산 계나 명태, 송이, 김치 등을 일본과 미국 등지에 수출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으며, 북한산 농수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일본이 2006년 가을부터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꾸며 위장 수출하려고 함.
 - 또한 일본 경찰은 안씨가 북한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공작원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본 경찰은 안씨가 벤츠를 조달하라고 지시한 조선노동당 산하 경제 관련 공작기관인 '조선상명'과 함께 한국에 유통센터를 세울 계획이었고, 지난해 가을에는 북한 내 전력설비에 필요한 희귀 금속을 조달하려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수풍발전소 전력 북한이 전량 사용"(7/6,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중국이 북한에 관리권을 넘긴 압록강 수풍댐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전량을 지난해부터 북한이 사용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중국 관톈(寬甸) 만족자치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중국 단둥(丹東)의 한 주민은 이 방송에 "수풍발전소에서 나온 전력은 원래 중국과 북한이 50%씩 사용해왔는데 1995년부터는 중국이 전량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북한에는 중국산 원유를 공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이 수풍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전량 북한에 공급하는 대신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말함.
 - 방송은 그러나 "수풍발전소와 가까운 신의주 등의 전기사정은 여전히 안 좋다"고 전함.
 - 신의주의 한 주민은 "수풍발전소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전기사정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 단둥 주민은 "수풍발전소 전기는 평양에 일부 공급되고 대부분은 강계 군수 공장 등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美국무부, 대북식량지원 금지법안 반대"(7/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국무부가 의회의 대북식량지원 금지 법안을 막으려고 상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
 - 이 소식통은 RFA에 "국무부가 상원 세출위원장실과 외교위원장실에 대북식량지원 금지규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하원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힘.
 - 국무부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공식적으로 대북식량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식량지원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측은 농업세출법안 외에도 외교세출법안을 포함, 대북지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 법안에 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앞서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
 - **EU, 식량분배 감시요원 50명 北에 배치키로(7/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최근 대북식량 지원계획을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인도적지원사무국(ECHO)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어가 가능한 감시요원 50명을 북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식량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남, 함북, 양강, 강원도 등 동북지역 4개 도에 식량을 우선지원하기로 결정
 - ECHO 관계자는 RFA에 "분배감시요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보장을 받았다"며 "어린이 보호시설과 병원, 식량배급소, 시장, 일반가정 등 400여 곳을 예고없이 방문해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2만t 분량의



쌀과 옥수수, 콩,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것이며, 식량 지원은 이르면 2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함.

- **北나선 내년부터 여객선 관광도 가능(7/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작년부터 열차로 진행되고 있는 나선-블라디보스토크-훈춘 관광이 내년부터는 여객선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최근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가 연재하는 '전문관광 분야에 힘을 넣고 있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에서 북한 국가관광총국 관계자는 "훈춘-블라디보스토크-나선 관광일정은 지난해부터 열차로 실현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해부터는 여객선으로도 운영된다"고 밝힘.

- **美 "영동한 곳에 식량지원해 세금낭비 못해"(7/7, 연합뉴스)**
 - 미국은 6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영동한 사람들에게 가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식량지원이든 다른 곳의 식량지원이든 과거에 그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에 가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아직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북단의 조사결과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와 관련, 북한의 식량지원 필요성과 투명성 문제 등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 **인도 대북지원 식량 남포항 도착(7/7, 연합뉴스)**
 - 인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긴급 구호용 식량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방송은 "인도 외교부가 5일 100만 달러로 사들인 콩 900t과 밀 373t 등 총 1천273t의 긴급 대북지원 식량이 남포항에서 하역을 마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힘.
 - 이어 "인도 외교부가 성명과 함께 제공한 관련 사진에 따르면 식량은 지난달 27일 하역된 것으로 추정 된다"며 "인도가 이번에 지원한 식량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전역의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

- **"北, 英재단에 식량요청 이메일 발송"(7/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경제무역정보센터의 황현철 소장이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지난주 영국의 톰슨 로이터재단에 보낸 사실을 6일 이 재단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방송은 이 재단의 공보국장을 인용해 "황 소장은 전자우편에서 원산과 사리원의 고아원 어린이 등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재단 대표에게 직접 전자우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전함.

- 이어 "전자우편에서 황 소장은 북한이 6월말 현재 수십만 t의 식량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8월 말까지 쌀과 밀, 옥수수, 콩 등 종류의 상관없이 어떤 곡식이든 지원해 달라고 재단 측에 호소했다"고 RFA는 밝힘.
- 또 방송은 "북한이 로이터재단 혹은 재단이 소개해 준 구호기관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기 원한다"며 "재단 대표단이 직접 방북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전자우편의 내용을 소개

● 북·중, 재생에너지 탐사·이용 협력 합의(7/7, 연합뉴스)

- 중국과 북한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탐사와 활용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태종수 비서는 6일 중국 공산당 저우용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음.
- 태종수 비서는 저우 상무위원에게 이번 방중의 주된 목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지열(地熱)자원의 개발과 관련, 중국의 경험을 배우려는데 있다고 강조
- 북한은 경제개발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태종수에 중국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하는 능력을 공동 증진하려고 관련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힘.

● "거리에 중국산車 활보...일제 밀어내"(7/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고 일본제 중고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올해 1~5월 무역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t 이상 대형이 105.1%, 1천500~3천cc의 중소형이 54% 늘어났다고 전함.
- 북한의 한 무역업자는 RFA에 "80~90년대 일본과 무역거래가 있을 때는 일제 중고차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북중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중국차들이 많아졌다"고 전함.
-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평양에서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벌어져 운송수단이 필요했을 수 있다" 분석했으며, "2000년 이후 일제 자동차들이 강제 폐기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함.

● 北 식량난에도 플렉스시계 사들이는 이유(7/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만5천500 달러(한화 4천843만원) 어치의 스위스산 시계 229개와 시계부품 9개를 수입했다고 자유아시아방



- 송(RFA)이 8일 스위스 시계산업연합' 자료를 인용해 보도
- 김일성 국방위원장은 통치수단 차원에서 자신의 생일(2·16)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 등 명절 때마다 당과 군의 간부, 주민에게 시계를 선물해 줌.
 -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스위스와 외교관계를 고려해 시계수입을 늘렸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북한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나진항의 2호 부두를 스위스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한이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과 관계에 신경 쓰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것임.

■ 기타 (대내 경제)

- 함경북도 경성애자공장, 애자성형공정의 CNC화로 제품의 질 개선 및 여러 나라 기업들과의 협조 강화 보도(7/4, 중통)
- 北, "유럽동맹의 對北 긴급식량협조 제공 결정" 소식 보도(7.8, 중통)
 - 유럽동맹의 긴급 인도주의 식량협조는 北의 식량형편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호상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의의있는 계기로 될 것임.

다. 사회·문화

● 北 평남 식창중, 中인사 이름 따 개명(7/7,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753호를 발표하고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7·11)을 맞아 평안남도 성천군 식창중학교를 라성교중학교로 개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전함.
- 중앙방송은 이번 개명이 "북·중 친선의 유대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라성교 열사의 위훈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 라성교는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전쟁 중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얼음물에 빠진 북한 소년을 구하고 숨졌다고 이 방송은 덧붙임.

● 北 평양국가미술단도 中 순회공연(7/7, 길림신문)

- 평양국가미술단이 지난달 2일부터 베이징과 광둥(廣東),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등에서 공연했으며 이달 22일과 23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연한다고 길림신문이 7일 보도
- 신문은 이 미술단이 하얼빈(哈爾濱)을 거쳐 오는 30일 단둥(丹東)을 끝으로 2개월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막을 내린다고 전함.

● 北 청년학생 평양서 김일성 회고무대(7/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청년학생들이 김일성 주석의 17주기(7·8)를 앞둔 6일 평양 청



년중앙회관에서 회고무대 '수령님과 청년들'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전함.

- 리영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관계자, 오룡택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등이 참석해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등의 노래를 부르고 김 주석을 찬양하는 발언

● 北적십자사 '긴급수해 기동대' 가동(7/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적십자회가 올여름 홍수피해에 대비해 '긴급수해 기동대'를 가동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북한 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RFA에 "긴급수해 기동대는 본부에서 24시간 대기하고 홍수 발생 때 피해지역에 급파돼 보건, 식수위생, 재난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힘.
- 또 수해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 대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의 각 시, 도에 '재난대비 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차원에서도 수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데서 의의 있는 과학영화들(바다광물질의 신비한 효과, 수압직기) 제작(7/4, 중통)
- 北, 2011년 세계청년역기선수권대회에서 우수성적 쟁취 보도(7/4, 중통·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시진핑 "한반도 문제 대화·협상으로 해결해야"(7/4,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4일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시 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단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전함.
- 박 본부장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최근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서 정세가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말함.



- 그는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관련국을 설득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강조
- 또 "우리는 북한과 접촉을 통해 북한이 평화를 필요로 하며,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큰 힘을 쓰고 강력한 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중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 일정은 경제발전과 민생 프로그램 향상과 관련된 곳에 집중돼 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전함.

● **北양형섭 이끄는 친선대표단 곧 방중(7/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친선대표단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돌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곧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전함.

● **北·中, 우호협력조약 50주년 대표단 교환(7/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가 10일부터 13일까지 우호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961년 7월 11일 북·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을 맺었다. 북한 측에서는 김일성 전 수상이, 중국 측에서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이 조약에 서명
- 이 조약은 제2조에서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뉴스는 전함.

● **北원유공업성-러시아 가즈프롬 회담(7/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원유공업성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가즈프롬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원유, 가스부문협조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토의했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연합뉴스에 의하면 러시아는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연결해 남한에 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희영 원유공업상이, 러시아 측에서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가즈프롬 부사장이 각각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日, 北 장용 IOC 위원 방일 특별허용"(7/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방일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이 시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연합뉴스에 6일 밝혔.
- 소식통들은 올림픽 관련 행사에는 '정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가 이같이 결정했지만, 향후 장위원 방일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이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아무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 같은 예외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짐.

● 中후진타오 "북중 친선 발전 추동"(7/7, 조선중앙통신)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조선(북)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중조 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함.
- 후 주석은 6일 중국 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아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 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고 추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후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중 친선을 수호하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전통적인 조-중 친선이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지향과 염원에 맞게 대를 이어 강화발전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

● 백악관 "北 핵프로그램 매우 심각하게 간주"(7/8,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 미국 백악관은 7일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 달러와 보석 등을 뇌물로 건넨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이같이 말함.
- WP는 이날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전병호 북한 노동당 비서가 칸 박사에게 보낸 서한도 함께 공개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은 정보 사항이라고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이런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함.
- 눌런드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정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6자회담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남북대화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설명

나. 6자회담(북핵)

● 美·日, 북핵 '3단계 접근법' 재확인(7/7, 교도통신)

- 미국과 일본은 6일 3단계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
-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함.
- 스기야마 국장은 남북관계가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그 뒤 6자회담 재개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뒤따른다는데 캠벨 차관보와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 그는 또 캠벨 차관보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그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간의 회담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미국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달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포럼(ARF) 기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

3. 대남정세

● 정부 '6.25전쟁 남북피해' 내달 초 첫 결정(7/5, 연합뉴스)

- 6.25전쟁 기간에 발생한 남북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첫 결정이 다음 달 초에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5일 통일부에 따르면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는 다음 달 2일 60여 건의 남북피해 신고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남북피해 여부를 결정함.
- 이는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신고를 받아들인 이후 첫 결실을 보는 것임.

● 유엔관광기구총회서 '北 재산권침해' 지적 검토(7/8, 연합뉴스)

-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소식통은 8일 "북측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에 이어 최근 법적 처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19차 UNWTO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통일부 '금강산 재산권 협의' 北에 제의(7/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8일 "7월13일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당국도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겠다"며 "협약이 성사되면 되는대로 민관협 의단이 우리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성사가 안 되면 그에 맞게 대응 하겠다"고 말함.
 - 또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리할 경우 기업인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상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北 "금강산문제, 오면 협의 하겠다"(7/10, 연합뉴스)
 -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의 '협의' 제의에 대해 "협의하려면 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소식통은 10일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8일 오후 현대아산을 통해 북측에 금강산 재산권과 관련한 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북측이 '(남측 협의단이) 오면 협의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전함.
 - 그러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동결·몰수한 남측 자산에 대한 '재산정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시진핑 "한반도 문제 대화·협상으로 해결해야">(7/4)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4일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음.
- 시 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단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전했다.
- 박 본부장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최근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 생각 한다"며 "한반도에서 정세가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관련국을 설득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강조했다.
- 또 "우리는 북한과 접촉을 통해 북한이 평화를 필요로 하며,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큰 힘을 쓰고 강력한 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중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 일정은 경제발전과 민생 프로그램 향상과 관련 있는 곳에 집중돼 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美·日, 북핵 '3단계 접근법' 재확인(7/7)

- 미국과 일본은 6일 3단계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외무성 아시아태평양주 국장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 3단계 접근법이란 '남북 비핵화 회담→미북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접근법임. 스기야마 국장은 남북관계가 우선 개선돼야 하며 그 뒤 6자회담 재개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뒤따른다는데 캠벨 차관보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 그는 또 캠벨 차관보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간의 회담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미국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달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포럼(ARF) 기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밖에 미·일 양국은 이날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스키야마 국장과 캠벨 차관보와의 협의에는 클리퍼드 하트 미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도 배석했음.

● "北, 핵 확보차 파에 350만 달러 뇌물" <칸 박사>(7/7)

- 북한이 1998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 달러(32억 원)와 보석 등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칸 박사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북한이 자신에게 보낸 공문을 함께 공개했다고 7일 보도했음.
- 전병호 북한노동당 비서(현 당 책임비서) 명의의 1998년 7월 15일자 서한에는 당시 파키스탄 주재 북한대사관의 강태운 참사가 300만 달러를 제항기르 카라마트 파키스탄 참모총장에게 전달했고 50만 달러와 다이아몬드와 루비 3세트를 줄피카르 칸 당시 중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음.
- 전병호 비서는 칸 박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사람을 보낼 테니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부품을 보내고 나면 그 비행기에 핵무기 개발 관련 문서와 부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음.
- 전 비서는 당시 강태운 참사의 부인인 김신애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한국의 정보기관, 파키스탄 정보부(ISI)가 개입됐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위험에 처한 강 참사 대신 다른 사람(유모씨)을 보내겠다고 적었음.
-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이 문서의 진위는 아직 100%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신문은 미국 당국이 과거 의심했던 정황과 일치해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음. 파키스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몰래 북한에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설비를 수출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챙겨 온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바 있음.
- 그러나 뇌물을 받은 주체로 지목된 카라마트 전 참모총장과 칸 전 중장 모두 칸 박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편지를 조작해 거짓으로 꾸민 일이라며 뇌물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음. 북한 역시 이 서한에 대한 논평 요구에 대답하지 않았음.

● 백악관 "北 핵프로그램 매우 심각하게 간주"(7/8)

- 미국 백악관은 7일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 달러와 보석 등을 뇌물로 건넸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이같이 말했다.



- WP는 이날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전병호 북한 노동당 비서가 칸 박사에게 보낸 서한도 함께 공개했음.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은 정보 사항이라고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이런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음. 그는 "불법 물질들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들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의무를 다시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그는 "우리는 파키스탄이 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파키스탄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놀런드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정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6자회담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남북대화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제는 진전을 위해 북한과 관계를 할 시기라는 식으로 한국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지난달 말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됐던 주제라고 답했음. 그는 "(남북) 양측이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이뤄지기를 보길 원하고,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음.
 - 그는 '6자회담이 남북대화의 불모로 잡혀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이쪽이나 저쪽이 한쪽을 인질로 잡는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진전이 이뤄지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우리는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놀런드 대변인의 이날 언급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좀 더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을 희망하는 미 정부의 속내를 엿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남북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기류가 오바마 정부 내에 있으며, 이를 직·간접적으로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임.
- <발리 ARF, 한반도 정세전환 모멘텀 주목>(7/10)
-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를 무대로 오는 21~23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 정세의 풍향을 바꿀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주목됨.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수순을 둘러싸고 첨예한 기 싸움을 벌여온 6자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라는 점에서임.
 - 표면상으로는 점점 없는 평행선 대치가 이어질 공산이 크지만 내용상으로는 대화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에 외교가는 주목함. 해 ARF는 한·미 대(對) 북·중 구도의 가파른 외교전으로 치달았던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ARF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 사건,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규탄, 2010년 천안함 후속대응을 놓고 남과 북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외교적 대립을 펼친 전장(戰場)이었음.



- 그러나 올해는 남북이 가급적 충돌을 피하고 대립각을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대응기조를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됨. 우선 미·중이 대화국면을 향해 큰 흐름을 잡고 남북 간 대화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어느 일방이 상황악화를 유발하는 쪽으로 강경 대응을 피할 경우 자칫 남북관계의 악화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소지가 있음.
- 우리 정부가 최근 전략적으로 유연해진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임. 천안함·연평도 사과와 남북 비핵화 회담의 분리를 공식화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임.
-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와 워싱턴 내부의 복잡한 시각 속에서 조심스럽게 방향모색을 피하려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이후 정부가 대외정책 대응에 있어 한층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음.
-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이후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운용과 관련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제시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음.
- 또 정부로서는 경험치상 북한과 충돌하면서까지 ARF 외교전에 '올인'할 실익이 크지 않음. 남북 사이에서 등거리를 취하는 아세안 특유의 '중립노선'과 북한을 초청한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반영해내기 어렵다는 인식임.
- 북한으로서도 ARF를 무대로 남측과 굳이 충돌하는 모양새는 피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물론 '우군'인 중국이 선(先)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드러내놓고 남한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어렵다는 분석임.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대화국면 조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통 큰' 지원과 대외관계 재설정을 모색해보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마이너스임.
- 물론 남과 북이 의도적으로 대립을 피하더라도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 대 북·중 구도의 '쟁점'과 '전선(戰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 ARF 회의 말미에 나올 합의문건인 의장성명에 남과 북 각자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가 문제임.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의 유효성과 유엔 안보리 테이블에 올라 있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규정해낼지가 여전히 관전 포인트임.
-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장에서 회동해 남북 비핵화 회담을 출발점으로 하는 3단계 접근방안을 재확인하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큼. 이는 남북대화 종단을 공개 선언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3국이 다시금 공조의 끈을 조이는 셈임.
-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이 거듭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화불용 입장을 재천명하고 중국이 '병행론'을 내세워 이에 편드는 양상이 빚어질 경



우 불가피하게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전 반적인 기류를 감안해볼 때 남·북·미·중이 쟁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는 쪽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커 보임.

- 의장성명에서 북한을 직접 특정하지 않은 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조성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북한 UEP 문제를 놓고는 일반적인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이 같은 전망에는 최근 중국과 아세안국가들 간 갈등의 핵심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ARF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북핵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깔려 있음.
-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공식 포럼 이외에 비공식적인 '장외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조우'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임. 남북한은 2000년대 들어 ARF를 계기로 종종 외교장관 회담을 가져왔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는 한 차례도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이번 ARF를 계기로 남과 북의 외교장관이 접촉한다면 실질적 진전이 없더라도 대화 분위기 형성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일각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박의춘 외상이 조우할 가능성이나 비공식적 6자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은 떨어져 보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ARF는 직접적으로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내지 못하겠지만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나. 미·북 관계

● 美 "EU 대북식량지원 이해..美결정은 안 이뤄져"(7/6)

- 미국은 5일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1천만유로 상당의 대북식량 지원 방침 결정과 관련,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임을 밝혔음.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우리는 EU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EU와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면서 "EU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혔음. 그는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 EU의 대북식량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전했다.
- 그는 이어 'EU의 결정이 미국의 향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가 되는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EU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밖에 그는 정무담당 차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이 차관 취임 뒤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는냐는 질문에 상원 인



준청문회 이전에 업무 분장을 밝히는 것은 이르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음.

- 하지만 그는 "알다시피 서면은 아시아 문제들, 특히 북한 문제들에 매우 경험이 많다"고 언급, 서면이 차관직에 공식적으로 오를 경우 북한 문제를 총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음.

● "미국무부, 대북식량지원 금지법안 반대"(7/6)

- 미국 국무부가 의회의 대북식량지원 금지 법안을 막으려고 상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음.
- 이 소식통은 RFA에 "국무부가 상원 세출위원장실과 외교위원장실에 대북식량지원 금지규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하원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상원 측이 국무부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 국무부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공식적으로 대북식량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식량지원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측은 농업세출법안 외에도 외교세출법안을 포함, 대북지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 법안에 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음.

● 美 "영퐁한 곳에 식량 지원해 세금낭비 못해"(7/7)

- 미국은 6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영퐁한 사람들에게 가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매우 강하다"고 밝혔음.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미국의 식량지원이든 다른 곳의 식량지원이든 과거에 그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에 가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미국 납세자와 미 의회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아직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북단의 조사결과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식량지원 필요성과 투명성 문제 등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이어진 질문에 "우리의 신뢰성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요한 우려"라면서 "우리가 그(지원)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



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음.

● **탈북 美시민권자 첫 탄생(7/7)**

- 미국 시민권을 받은 첫 번째 탈북자가 탄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음. 방송은 이 탈북자가 2006년 5월 미국에 입국한 6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음.
- 미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의 이 탈북자는 VOA에 "미국 여권을 갖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위험이 발생해도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다"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시민이 됐다는 데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음.
- 또 미국의 한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미국에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부모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류 요건만 충족되면 초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북한의 부모님을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우선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까지 손수 인도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北 평양국가미술단도 中 순회공연(7/7)**

- 북한의 평양예술단에 이어 평양국가미술단도 지난달부터 중국 전역을 돌며 순회공연을 펼치고 있음. 평양국가미술단이 지난달 2일부터 베이징과 광둥(廣東),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등에서 공연했으며 이달 22일과 23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연한다고 길림신문이 7일 보도했음.
- 신문은 이 미술단이 하얼빈(哈爾濱)을 거쳐 오는 30일 단둥(丹東)을 끝으로 2개월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막을 내린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미술단은 미술사 김철의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일명 '절단 미술' 등 고난도 미술과 다양한 곡예로 가는 곳마다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
- 이 미술단은 1952년 설립돼 북한 고유의 특색을 살린 미술 등을 개발, 규모를 키웠으며 북한의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 등을 받고 각종 국제 미술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음. 평양국가미술단에 앞서 북한의 3대 예술단 가운데 하나인 평양예술단이 지난 5월 말부터 대형 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 중국 순회공연을 펼치고 있음.
-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기념하고 북·중 우위를 다지기 위해 중국 문화부 초청으로 중국에 온 평양예술단은 외국 예술단으로서는 최장기인 3개월간 중국 순회공연을 벌이며 오는 10일에는 베이징 전람관극장 무대에 오름.

● **中 후진타오 "북중친선 발전 추동"(7/7)**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조선(북)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중조 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



신이 7일 전했다.

- 후 주석은 6일 중국 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아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 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고 추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후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중 친선을 수호하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전통적인 조-중 친선이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지향과 염원에 맞게 대를 이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 북·중, 재생에너지 탐사·이용 협력 합의(7/7)

- 중국과 북한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탐사와 활용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태중수 비서는 6일 중국 공산당 저우용캉(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태중수 비서는 저우 상무위원에게 이번 방중의 주된 목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지열(地熱)자원의 개발과 관련, 중국의 경험을 배우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경제개발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음.
- 저우 상무위원은 태중수에 중국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하는 능력을 공동 증진하려고 관련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5년 12월 중국과 북한은 해상에서 원유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겸임하는 저우 상무위원은 "나도 한때 중국의 석유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일했기 때문에 한 나라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태중수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친선참관단은 5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 중임. 노동당 친선참관단은 6일 오후에는 류치(劉琪) 베이징시 당서기를 예방했다.

● 우호협력조약 50주년 北대표단 中 도착(7/9)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9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양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현지 시각) 북한 고려항공 정기편으로 베이징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했다.
- 양 부위원장 일행은 중국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은 후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귀빈 출구를 통해 중국 측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베이징 시내로 향했다. 양 부위원장은 12일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11일 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



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고 공개했음. 북중우호협력조약 50주년을 맞아 중국 측에서는 장덕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10일부터 13일까지 북한에 보냄.
- 1961년 7월 11일 북·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을 맺었음. 북한 측에서는 김일성 전 수상이, 중국 측에서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이 조약에 서명했음. 이 조약은 제2조에서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
- 한편 홍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쟁 자동 개입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조선(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관련국들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긴다"고 답변했음.

● **中장덕장 부총리 평양 도착(7/10)**

- 장덕장(張德江)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대표단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0일 보도했음.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북중우호조약 50돌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장덕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대표단이 오늘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음.
- 대표단은 장 부총리 외에 리청린(李盛霖) 교통운수부장,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초하경 국무원 부비서장, 천지엔(陳健) 상무부 부부장, 장건생 외교부장 조리, 양이앤이(楊燕怡)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으로 구성됐음. 대표단은 방북 직후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음.
- 한편 우동허(武東和)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대의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도 같은 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김정일, 후진타오에 '우호조약' 50주년 축전(7/10)**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에게 북중우호조약 50주년 기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조중우호조약 체결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항구적으로 공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



- 적 기초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 이었다"고 밝혔다.
- 이어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북한)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중앙통신은 이날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축전에서 "중조우호조약은 중조관계에서 중요한 문건이고, 중조친선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친선"이라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 일·북 관계

● "日, 北 장용 IOC 위원 방일 특별허용"(7/7)

-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방일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6일 밝혔다.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음.
- 소식통들은 그러나 올림픽 관련 행사에는 '정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가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장 위원의 방일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 등 일부 관료들은 장 위원의 입국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아무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 같은 예외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 참석한 장 위원은 여행계획을 묻는 질문에 도쿄를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음. 일본 정부는 11~17일 장 위원의 자국 내 체류를 허용하면서 OCA 총회 참석 등으로 공식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임.

마. 러·북 관계

● "러-北 정상회담 당분간 예정된 바 없다"(7/5)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현재로선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이 5일 밝혔다.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나리슈킨 실장은 이날 이틀 동안의 일본 방문을 마치면서 도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회담은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이며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러-북 정상은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극동 지역을 방문한 지난달 30



일이나 이달 1일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 간 정상회담이 준비됐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러시아 극동지역 통신사인 '보스톡-미디어'는 4일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정해진 일이었고 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됐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양국 정상 회담 준비가 극비리에 진행됐으나, 극동지역과 일본, 한국 등의 언론 및 정보기관이 이를 알아채면서 회담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방러했을 경우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빅토르 이사예프가 그를 수행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 애초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낮 러-북 국경 지역의 하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역사에는 양국 국기가 내걸리는 등 모든 준비가 갖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했을 경우 극동의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유대인자치주, 아무르주 등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극동 지역 최대 발전소인 아무르주의 부레이 수력발전소를 시찰할 계획이었다고 보스톡-미디어는 전했다.
- 러시아와 북한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러시아산 가스의 남북한 공급을 위한 가스관 부설 등의 사업 외에 극동 지역의 잉여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논의해오고 있음.

● 北원유공업성-러시아 가스프롬 회담(7/5)

- 북한 원유공업성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가스프롬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원유·가스부문협조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토의했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러시아는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연결해 남한에 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희영 원유공업상이, 러시아측에서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가스프롬 부사장이 각각 참석했음.

바. 기 타

● EUI집행위 대변인 "北 지원 식량 1차분 내달 도착"(7/4)

- "1천만유로 규모의 대(對) 북한 지원 구호식량 가운데 1차분이 내달 북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식량이 북한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엄격하게 감시할 것이다."
-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에 4일 전격적으로 대북 구호식량 지원 계획을



-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데이비드 셔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 셔릭 대변인은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한 EU 실사단이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분명히 심각하고 시급하게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그는 65만 명의 주민을 '기아선상'에서 구제하기 위해 EU가 집행할 1천만유로(약 155억 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번 구호는 추수 이전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구호"라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이 규모는 지난달 현지를 다녀온 전문가팀의 평가를 토대로 책정한 것이다. 5세 이하 어린이 등 영양실조에 가장 취약한 주민을 직접 목격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세밀하게 분류한 평가 보고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 셔릭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10월 수확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며 " 지켜보자"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식량이 배분되는 과정의 투명성 못잖게 실사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전문가팀의 조사 과정 초기에 사소한 문제가 있었으나 다 해결됐으며 전문가팀은 매우 엄격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평가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 집행위 측은 북한의 올해 곡물 작황이 근년 들어 가장 저조한 데다 춘궁기인 현 시점이 식량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원 결정이 난 이후엔 구호식량의 시급한 배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셔릭 대변인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선 내달에 1차분이 북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1천만유로 상당의 식량 모두가 정확히 언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약속을 어기고 지원된 구호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경우 지원이 지체 없이 중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원해야 만일의 상황에 '수도꼭지'를 잠그듯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셔릭 대변인은 "우리가 지원하는 구호식량이 북한의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집행위 관계자와 세계식량계획(WFP) 요원들이 현지에서 구호식량의 전용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EU, 식량분배 감시요원 50명 北에 배치키로(7/6)**
- 최근 대북식량 지원계획을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인도적지원사무국(ECHO)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어가 가능한 감시요원 50명을 북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식량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남, 함북, 양강, 강원도 등 동북 지역 4개도에 식량을 우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ECHO 관계자는 RFA에 "분배감시요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보장을 받았다"며 "어린이 보호시설과 병원, 식량배급소, 시장, 일반가정 등 400여 곳을 예고 없이 방문해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감시요원을 확보 한다"며 "긴급 식량지원의 대상에 병원이나 고아원 등 공공시설이 많아 상당량의 식량은 북한 정부기관을 통해 분배 된다"고 말했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2만t 분량의 쌀과 옥수수, 콩,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식량 지원은 이르면 2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 WFP가 식량 대부분을 북한에 분배하고 영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세 이브더칠드런'이 치료 목적의 기능성 식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식량을 직접 분배하지 않지만 분배실태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다.

● 인도 대북지원 식량 남포항 도착(7/7)

- 인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긴급 구호용 식량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방송은 "인도 외교부가 5일 100만 달러로 시들인 콩 900t과 밀 373t 등 총 1천273t의 긴급 대북지원 식량이 남포항에서 하역을 마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어 "인도 외교부가 성명과 함께 제공한 관련 사진에 따르면 식량은 지난달 27일 하역된 것으로 추정 된다"며 "인도가 이번에 지원한 식량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전역의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리 프라탑 싱 북한주재 인도 대사가 남포를 방문해 구호식량이 인근 창고에 임시로 저장되는 광경을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 "北, 英재단에 식량요청 이메일 발송"(7/7)

-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경제무역정보센터의 황현철 소장이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지난주 영국의 톰슨 로이터재단에 보낸 사실을 6일 이 재단이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 방송은 이 재단의 공보국장을 인용해 "황 소장은 전자우편에서 원산과 사리원의 고아원 어린이 등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재단 대표에게 직접 전자우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전했다.
- 이어 "전자우편에서 황 소장은 북한이 6월말 현재 수십만 t의 식량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8월 말까지 쌀과 밀, 옥수수, 콩 등 종류의 상관없이 어떤 곡식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재단 측에 호소했다"고 RFA는 밝혔다.
- 또 방송은 "북한이 로이터재단 혹은 재단이 소개해 준 구호기관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기 원한다"며 "재단 대표단이 직접 방문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전자우편의 내용을 소개했다.



● 유엔관광기구총회서 '北 재산권침해' 지적 검토(7/8)

-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소식통은 8일 "북측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에 이어 최근 법적 처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19차 UNWTO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는 10월 8~1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UNWTO 총회는 154개 회원국의 장·차관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관광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임. 회원국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도 포함돼 있음.
- 북측은 지난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 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음.
- 국제 관광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북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3의 파트너를 통한 관광재개에 따른 남측 재산권의 추가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측은 지난달 29일 현대아산 측에 통지문을 보내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북측은 통지문에서 재산정리 방향에 대해 "모든 남측기업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자산을 임대·양도·매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음. 정부는 북측의 방북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어차피 북측이 남측 자산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나 민간 투자기업이 방북해도 북측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방북 요구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 정부는 최근 금강산지구 내에 시설 등 자산을 직접 소유한 기업과 시설 내 임대사업자 등을 상대로 대응방안을 협의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캠프 캐럴 내 금속성 매설물 있다"(7/8)

- 한미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에 금속성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은 금속성 매설물 지역을 포함해 총 40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고엽제 매립 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음.
- 한미 공동조사단은 8일 경북 칠곡 군청에서 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향후 토양 시료 채취 계획을 밝혔음.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6일까지 헬기장 1 지역에 대해 고엽제 드럼통을 찾기 위한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 지역이 나타났다.
- 헬기장 구역은 이번 고엽제 매립 의혹이 촉발된 곳임. 전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는 지난 5월 미국 현지 TV 인터뷰에서 "헬기장에서 가까운 기지 뒤쪽에 드럼통을 묻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미 공동조사단은 헬기장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전기비저항탐사법(ER), 자력탐사(MS) 등 3가지 방법의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했음. 자력탐사 결과 헬기장 1 구역의 정중앙과 우측 지역, 가운데 부분에 직선 모양으로 이상 징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대가 발견됐다.
- 이중 정중앙 지역은 콘크리트가 덮힌 소방훈련지역이고 우측의 직사각형 모양은 자동차 바퀴 세척지역(Wash Rack)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내의 철망으로 인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분석됐음.
- 가운데 직선으로 나타난 이상대는 급수관로이고 북쪽 이상대는 금속성 울타리 때문이라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나머지 이상대 지역은 금속성 매설물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조사단은 밝혔음.
- ER 조사에서도 금속성 물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발견됐고 GPR 조사에서는 드럼과 같은 물체가 지하에 분포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레이더 신호 패턴이 관측됐음. 즉 3가지 방법의 지구물리탐사 결과 소방훈련지역이나 급수관로, 울타리 등을 제외한 이상대 지역에 실제 고엽제 드럼통이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임.
- 이에 따라 공동조사단은 지구물리탐사 결과 이상대 지역과 2개의 비투과지역, 기타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포함해 총 40개 지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음.
- 토양시추조사(coring)는 땅에 2인치 정도의 가는 관을 박아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으로 당장 고엽제 매몰 여부는 밝히기 어려움. 시추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해 8월 말께 최종 분석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양측은 아울러 외부 토양조사와 캠프 캐럴 내 헬기장 및 D구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함. 41구역에 대한 지하수 관측 정 시료채취와 지구물리탐사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됨.

- 양측은 이번에 토양시추조사를 실시하는 헬기장 1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지구물리탐사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토양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임.

● **민주,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7/9)**

- 민주당은 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음.
- 이들은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결의안'에서 "국회는 재협상으로 인해 훼손된 이익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 포지티브 열거방식으로서의 전환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 등 독소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음.
-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재재협상에 응해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국책·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의안 제출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 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부의장 등 10명이 참여했음.
- 김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타결된 한미 FTA 재협상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 어렵게 이룬 이익균형을 훼손한 굴욕적 협상"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외통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임.

나. 한·중 관계

● **中선양 제10회 '한국주간' 13일 개막(7/8)**

- 주중국선양(瀋陽)한국총영사관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선양 한국주간이 오는 13일 개막함. 선양한국총영사관과 선양시는 8일 한국주간 언론 발표회를 갖고 제10회 한국주간 행사를 오는 13~17일 개최한다고 밝혔음.
- 13일 막이 오르는 이번 한국주간 기간 한국상품 전시회와 한·중 경제 합작 교류행사, 한·중 기업 간 투자 협약 체결 등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림. 한국인과 조선족이 참가하는 노래자랑대회, 한국 전통 음식 시식회, 한·중 테니스대회 등 문화행사도 펼쳐짐.
- 선양 한국총영사관과 선양시는 한·중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2002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주간을 개최한 이래 해마다 이 행사를 열고 있음. 2009년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고 지난해는 1천200여 명의 한상(韓商)들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에서 개최된 최초의 한상대회인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를 열어 호평 받았다.

다. 한·일 관계

● 日요코하마서 전직 경찰관이 韓여성 토막 살해 (7/4)

-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일본인 전직 경찰관이 한국인 아내를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붙잡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음.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은 이날 시신유기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트럭 운전자 야마구치 히데오(山口英男, 50)씨를 체포했다. 살인 혐의도 조사 중임.
- 경찰에 따르면 야마구치씨는 지난해 9월 1일 밤 요코하마시 미나미(南)구의 한 아파트 안에서 한국 국적의 조모(사망 당시 41세, 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다음날인 9월 2일 새벽 조씨의 두 발목을 비닐 봉지에 넣어 집 근처 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음.
- 조씨는 지난해 9월1일 저녁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촬영된 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9월 2일에는 비닐봉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외출하는 야마구치씨의 모습이 방범카메라에 찍혔음.
- 자택 마루에선 핏자국이 발견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조씨의 것으로 확인됐음. 야마구치씨는 지난해 9월 3일 조씨의 수색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4일 조씨의 두 다리가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발견됐음. 야마구치씨는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잘라서 강에 버렸다"며 "혼자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 언론 보도와 주(駐)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씨는 1995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에서 음식점을 운영했고, 십여 년 전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던 야마구치씨를 손님으로 만나 2004년 9월 결혼했음.
- 야마구치씨는 2004년 12월 조씨가 불법체류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혐의(입국난민법 위반)로 불구속송치된 뒤 감봉 처분을 받자 사표를 냈음. 당시 계급은 경부보(경위)였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후 야마구치씨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하는 일을 했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내 조씨로부터 때때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썼음. 작년 9월 범행 당시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요코하마의 아파트에서 나와 트럭 운전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음.
- 조씨는 2009년께 친구인 한 여성에게 "남편이 싸움하던 도중 벽에 내목을 대고 놀렸다. 죽는 줄 알았다"고 털어놓는 등 금전 문제를 둘러싼 부부 갈등으로 고심했고, 지난해 8월에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음. 조씨의 친구는 "조씨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뒷바라지했는데, 이런 지경에 처하다니 정말 불쌍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한편 요코하마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유족에게 연락하고, 일본의 피해자구호기금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 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日 외무상, 17일 한국 방문 최종 조율"(7/7)

- 일본의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최종 협의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마쓰모토 외무상이 17일과 1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한국 측과 최종 조율중이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마쓰모토 외무상이 방한하면 3월 취임이후 첫 한국 방문임. 일본 외상은 올해 1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당시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했었음.

● <교류 늘자 강력사건도 증가..韓日, 대책 고심>(7/8)

- 한일 양국 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강력 사건이 덩달아 증가하자 양국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8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강석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과 가쓰야 잇카타이(克哉一方井) 외무성 해외방인(邦人)안전과장이 6일 일본 외무성에서 첫 회의를 열었고 앞으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음.
- 그동안 양국 영사 담당자간 회의는 주로 재일동포 차별 방지에 초점을 맞췄고,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장이 주로 참석했음. 재외동포과장 대신 재외국민보호과장이 일본을 찾은 이유는 지난해 한일 양국을 오간 이들이 5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교류가 늘면서 강력 사건이 덩달아 증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한류 스타 류시원의 팬으로 지난해 한국에서 실종된 다나하시 에리코(棚橋えり子, 59)씨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한국측은 2009년 6월 일본 가나자와(金澤)시에서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강모(사망 당시 32세)씨나 지난해 9월 요코하마(横浜)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조모(사망 당시 41세)씨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외교소식통은 "과거 한일 외교 문제가 주로 역사·정치적인 사안에 집중됐다면 최근 양국 간 교류가 늘면서 국민들의 생활·안전상 문제가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올드커머'(재일동포 1~5세)가 아니라 '뉴커머'(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온 교포)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 주일 한국 공관은 이와 별도로 7일 일본 지역 대사와 총영사, 강석희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일본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강력사건 대책을 논의했음. 이 자리에서는 일본 내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들 간 긴밀한 연락과 신속한 보고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음.

● "日 납치담당상 15일 방한 예정"(7/9)



- 나카노 간세이(中野寛成)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이 1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음. 나카노 납치문제담당상은 1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관계 기관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의 방한은 지난해 4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담당상 겸 공안위원장 방문 이후 1년 3개월 만임.

라. 중·일 관계

● 日 외상, 中 활발한 해양진출 견제(7/5)

- 일본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의 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음.
- 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쓰모토 외무상은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다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 측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했음.
- 마쓰모토 외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문제와 관련 "일중 양국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규정하고 "최근 중국의 주변 해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며, 국제적인 룰의 준수와 함께 적절한 대책을 요청 한다"고 밝혔음.
- 그는 "해양을 둘러싸고 관계국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며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협력 하겠다"면서 이달 하순 열리는 아세안 지역포럼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국과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이에 대해 양 외교부장은 "양국 간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의 해양 진출과 관련한 다국 간 협의에 반대했음.
- 일본 외상의 중국 방문은 작년 9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태 이후 처음임.
- 마쓰모토 외상은 센카쿠 사태이후 중국이 계속 미루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조약 협상의 재개를 요구했음. 또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도 완화할 것을 요청했음.

● 中·日외교, 분쟁 속 협력원칙 천명(7/5)

-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한때 꺾끄러운 관계에 놓였던 중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원칙을 천명했음. 5일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마쓰모토 타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회담을 했음.
- 일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은 작년 8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중일 고위 경제대화 참석차 방문한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진 것임.



- 양측은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이후 구조 및 재건 과정에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변화시킨 것이 중일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음.
- 양국은 향후 여러 분야에 걸친 실무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내년 국교 정상화 40주년 공동 기념행사를 준비해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나가지고 합의했음.
- 양국 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양 부장은 "양국이 동중국해와 관련한 원칙과 공통 인식을 실천해나감으로써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지야 한다"고 말했음.
- 닌자오 분쟁과 관련해서도 양 부장은 "닌자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재차 강조했다.
- 아울러 그는 지난달 22일 일본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음.
- 4일 마쓰모토 외무상을 면담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중일 관계의 발전은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 한다"며 "두 나라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많은 공통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음.
- 중국과 일본은 작년 9월 발생한 닌자오 선박 충돌 사건 이후 고위층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극한 대립을 보였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 관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